

민주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외면 안돼”...선구제·후구상 촉구

이재명 “선구제 후구상 되지 않으면 말 뿐인 대책” “여당 때문에 개정 어려워, 특별법 통과 끝까지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 시행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보증금을 우선 보장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집권 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한다”며 “선 보상 후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사기 대책은 말 뿐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6개월 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것도 한 건도 없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이 어제 국회 앞과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벌이기까지 했다. 민주당이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쟁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국토교통위원회) 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추운 겨울밤 연인과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청년들이 바람찬 거리로 나와 외치는 소리는 한마디로 ‘살려주세요’라며 ‘실제 전세 피해자가 2만이 될지 3만이 될지 예측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사기의 평등성을 이야기했던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주거사다리를 파괴하는 아주 질이 나쁜 민생범죄’라고 말했다”며 “약속을 실천으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이 청년 임차인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무너뜨리는 그 불안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의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전광훈 목사 품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피해자 눈물 멈추게 할 선구제 후회수 추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전세피해가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하고 청년 전세피해자들이 더이상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선구제 후회수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전세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를 담은 전세피해 특별법을 꼭 개정하겠다”



고 다짐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건 완화와 사각지대 개선에 공감하면서도 야당이 주장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는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5일 국

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을 보고받았지만 특별법 개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김정재(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조오성·허종식(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김혁민기자

이재명 “이낙연과 만나 협의할 것...당 단합·소통 매우 중요”

이낙연 출당 청원 삭제 지시하며 강성지지층에 자제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현 지도부 체제에 날을 세우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 협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출당을 요구하는 강성당원 청원에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며 연일 발원 수위를 높이자 진화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와의 회동 계획에 대해 “당의 단합 그리고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누구나 열어놓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이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며,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강성 지지층의 행동에 자제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요체고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의 정지적 결사체인 정당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며 “상대 의견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할 게 아니라 자신의 반론을 자유롭게 말하며 민주적 토론을 만들어가는 게 민주당다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한 당원은 지난 3일 이 전 대표 출당 청원 글을 당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전날 오후 5시 기준 2만명이 넘는 당원이 이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77.7% 당원이 뽑은 이재명 대표를 (통해) 민주당 당원은 총선을 치르길 원한다”며 “힘을 모아 통합해야 할 때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는 이 전 대표를 당원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계속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어떤 제도가 반드시 옳다고 할 순 없다”며 “국민 뜻, 당원 의견, 의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모아볼 생각이다. 현재도 많이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권기자

민주, 2만명 돌파 이낙연 출당 청원 삭제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을 촉구하는 당원들의 청원을 삭제 조치했다.

이날 민주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3일 등록된 이 전 대표의 출당 청원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당원 2만442명의 동의를 받아 논란이 됐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는 권리당원 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도부에 보고되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도부가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원인은 “77.7% 당원이 뽑은 이 대표를 (통해) 민주당 당원은 총선을 치르길 원한다”며 “힘을 모아 통합해야 할 때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는 이 전 대표를 당원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당원들의 출

당 청원에 대해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 삭제는 이 대표가 당내 화합을 강조한 메시지를 낸 이후에 이뤄졌다. 이 대표의 메시지에 힘을 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론을 자유롭게 말하며 민주적 토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당다운 모습”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출당 청원에 대한 입장을 담은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김수권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